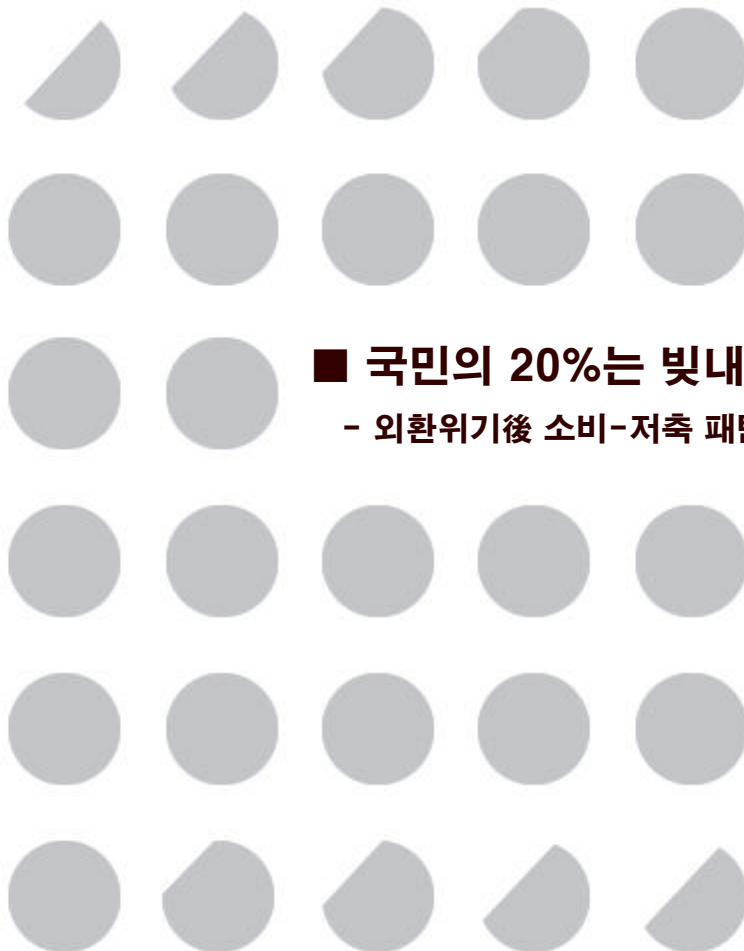




07-16 (통권 247호)

2007.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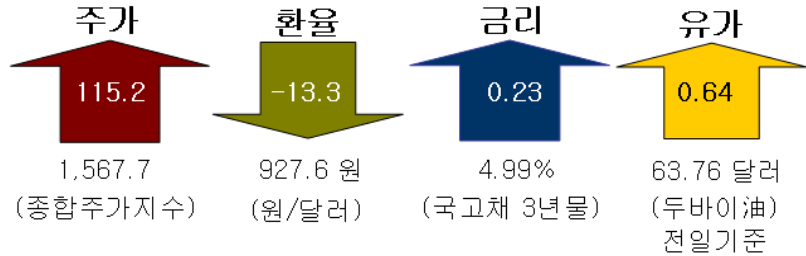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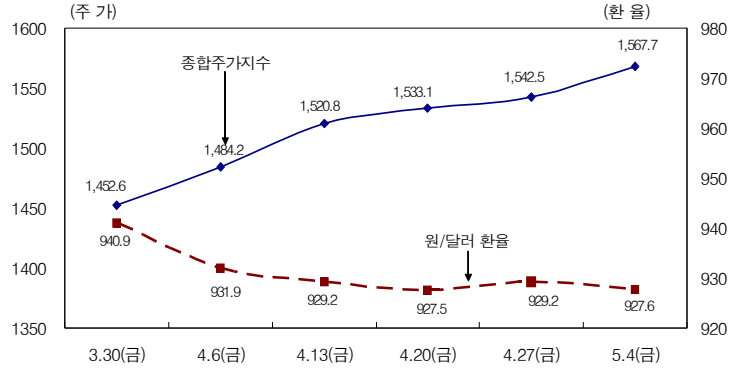
韓國經濟週評



■ 국민의 20%는 빚내어 살고있다
- 외환위기後 소비-저축 패턴의 변화

**BETTER THAN
THE BEST!**

月間 主要 經濟 指標 (3.30~5.4)



차 례

| | |
|---|----|
| 주요 경제 현안 | 1 |
| □ 국민의 20%는 빚내어 살고있다 - 외환위기後 소비-저축 패턴의 변화 | 1 |
| 월간 경제 동향 | 20 |
| □ 실물 부문 : 내외수 동반 호조로 경기회복 기대감 상승 | 20 |
| □ 금융 부문 :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강세 | 21 |

□ 본 자료는 CEO들을 위해 작성한 주간별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설명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총 괄 : 한 상 완 경제연구본부장 (3669-4121, swan@hri.co.kr)
 □ 거시경제실 : 한 상 곤 연구위원 (3669-4120, sghan49@hri.co.kr)

Executive Summary

□ 국민의 20%는 빚내어 살고있다

1. 국내 가계 저축률 하락의 현황과 문제점

(현황) '80년대 후반 이후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다. 개인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순 저축률을 보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를 기록한 이후 대폭 감소하여 2006년 현재 3.5%에 머물러 있다. 또한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가 심화되고 있다. 5분위계층과 1분위계층간의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인 '96년 35.4%p에서 '05년에는 51.0%p로 확대되었다. 특히, 소득이 가장 낮은 1분위 계층은 '03년 -14.8%, '04년 -17.5%, '05년 -13.5% 등 負(-)의 저축률을 기록하고 있다. **(저축률 하락의 문제점)** 가계 저축률의 하락은 **첫째**, 소득 1분위 저소득계층의 생계형 차입행태를 심화고착화시킴으로써 동 계층의 현재 및 미래의 기초생활마저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노후대비 자금의 확보에 차질을 초래하여 가계부문의 불안정성을 크게 심화시킬 것이다. **셋째**, 이는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것이다. **넷째**, 가계 저축률 하락은 현재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단순소비가계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오히려 확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하에서는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을 살펴보고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2. 가계 저축률 하락의 원인 분석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증가율) 외환위기 이후 가처분소득 증가는 크지 않은데 반하여 소비 증가율은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또한 외환위기 직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계층별 가계 저축률 격차도 확대되는 추세를 띄고 있다. 소득분배구조의 악화로 인하여 저소득계층이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단순소비가계의 비중도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정부의 종합적인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부동산 편중)** 외환위기 이후 국내 경제 회복을 위한 정부의 저금리 정책은 최근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반면, 2000년대 초반 부동산시장 활성화 정책, 정부의 균형발전정책 추진과 행정수도 이전에 따른 지가 상승 등으로 부동산시장의 투자수익률은 높게 유지되어왔다. 이에 따라, 가계의 금융자산이 안전자산인 은행 저축으로부터 위험자산인 부동산으로의 쏠림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특히, 한국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안전자산”의 잘못된 인식은 시중 부동산자금의 급격한 부동산 시장 이동을 부채질 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와 같은 부동산 중심의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변화는 위험도를 증가시켜 가계부문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1990년대 이후의 한국 국민의 소비패턴이 과거

생활필수품 위주에서 교통·통신, 여가생활 등으로 고급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주당 평균 근로시간의 감소 추세는 여가에 대한 선호도를 꾸준히 증가시키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가계의 부양부담 증가) 노년부양비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인구구성상 노년인구 비율의 증대는 생산가능인구의 저축여력을 떨어뜨려 저축률의 하락을 가져온다. 또한 평균자녀의 수가 줄어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 대비 공교육비·사교육비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한편 체감실업률 20%에 육박하는 청년실업도 부모 세대의 부양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 부담)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과 저금리 정책기조 하에서의 주택금융수요 증대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채금액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가계의 저축여력을 저하시키고 있다. 2005년 말 현재 가계대출 총액은 약 330조원으로 7%의 금리를 가정할 경우 가계의 이자비용 부담은 약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5년 가처분소득의 5.2%) 한편, 소비자 금융의 확대로 인한 유동성 제약의 완화는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저소득계층의 급격한 저축률 하락의 단초를 제공하고 있다.

3. 정책적 시사점

첫째, 저축률의 하락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은 Welfare보다는 Workfare를 증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Welfare 측면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고실업률을 고착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가계의 소득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Workfare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심한 저소득층, 청년층,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둘째, 미시적 차원에서는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지원확대보다는 불필요한 지출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공영 운송수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려 교통관련 비용(주행 비용) 부담을 낮춰야 한다. 공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사교육 부담도 줄여야 한다. 또한, 가계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계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한다. 대국민 경제 및 금융 교육을 강화하여 가계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또한, 토지 가격 부담을 줄인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과 같이 저소득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서 저축율을 더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 파산까지도 초래할 수 있다.

< 국민의 20%는 빚내어 살고 있다 >

- 외환위기後 소비-저축 패턴의 변화 -

| | 현 황 | 문제점 |
|---|--|---|
| 가 계 저 축 륜 하 락 의 현 황 과 문 제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 저축률 하락 •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 확대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 계층 생계형 차입행태 고착화 • 노후대비 저축 차질 • 재정부담의 급증 • 민간소비의 변동성 확대 |
| 저 축 륜 하 락 원 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 증가율을 따라가지 못하는 소득 증가율 •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부동산 편중 • 선진국형 소비 패턴으로의 전환 • 가계 부양 부담 증가 • 가계 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 |
| 정 책 적 시 사 점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Welfare보다 Workfare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경제정책 원칙 수립 • 저소득층에 대한 직접적 보조금 증대보다 불필요한 지출 부담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교통 투자 확대로 교통비용(주행비용) 부담 감축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한 사교육 부담 경감 - 가계부채 억제를 통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최소화 • 저소득층 가계에 대한 건전한 재산 형성 유도 및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국민 경제 및 금융교육으로 균형된 자산 포트폴리오 구성 유도 - 환매조건부 주택 공급 등 저소득층 건전한 재산형성 지원 • 가계 이자부담 완화 및 파산 방지를 위한 금리 인상 자제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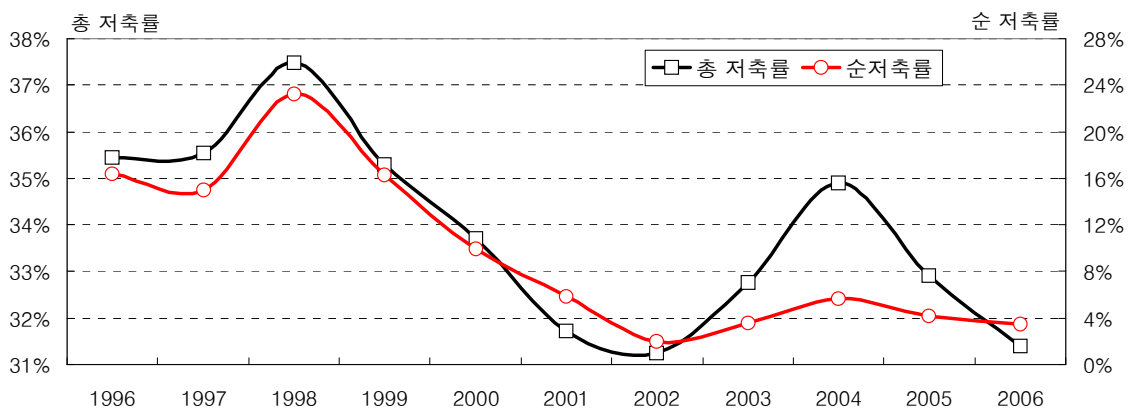
1. 국내 가계 저축률 하락의 현황과 문제점

1) 현황

(1) 가계저축률의 추세적 하락

-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우리나라의 총 저축률¹⁾은 지속적으로 감소되어 왔는데, 특히 외환위기 이후 저축률이 급락하고 있음
 - 1998~2006년 기간 중 기업과 정부부문의 저축률은 각각 6.4%p와 1.5%p 증가한 반면, 가계부문의 저축률은 14.0%p 하락함
 - 2004년 이후로는 기업부문의 저축률도 하락세로 돌아서 총 저축률의 하락을 견인하고 있는 실정임
- 가계부문의 저축성향을 보여주는 순저축률²⁾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23.2%를 기록한 이후 큰 폭으로 감소하여 2006년 현재 3.5%에 머물러 있음

< 총 저축률 및 가계부문의 순 저축률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1) 저축을 국민총처분가능소득으로 나눈 값을 백분율로 표시
 2) 개인부문 순저축율은 개인부문 순저축을 개인 순조정 처분가능소득에 연금기금의 가계순지분 증감조정을 더한 것으로 나눈 것임

(2) 소득계층 간 저축률 격차 확대

-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 전 소득계층에 걸쳐 급격한 하락세를 나타낸 후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음
 - 5분위 계층은 외환위기 기간 중 오히려 저축률이 증가하였는데 전체적으로는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가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 중간계층에 해당하는 2~4분위 계층의 저축률은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5~10%p 정도 낮아진 상태에서 외환위기 이전의 수준을 회복하지는 못하고 있음
 - 1분위 계층의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전 1~2%대의 낮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차입(負의 저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5분위 계층과 1분위 계층 간의 저축률 격차는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 35.4%p에서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어 2005년 현재 51.0%p로 늘어남

< 소득계층별 저축률 추이 >

(%)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1분위 계층 | 1.5 | 1.9 | -7.6 | -15.4 | -9.0 | -9.3 | -8.5 | -14.8 | -17.5 | -13.5 |
| 2분위 계층 | 20.0 | 19.9 | 19.3 | 11.7 | 9.4 | 10.2 | 11.9 | 10.8 | 11.0 | 10.4 |
| 3분위 계층 | 24.0 | 27.1 | 26.5 | 19.6 | 16.4 | 15.7 | 19.7 | 20.6 | 20.1 | 21.9 |
| 4분위 계층 | 32.2 | 32.7 | 32.7 | 25.9 | 25.1 | 25.5 | 26.8 | 27.0 | 28.2 | 27.4 |
| 5분위 계층 | 36.9 | 38.9 | 44.4 | 39.0 | 37.0 | 38.8 | 41.1 | 39.7 | 38.3 | 37.5 |
| 평균 | 28.3 | 29.6 | 31.5 | 25.1 | 23.6 | 24.5 | 26.4 | 25.4 | 24.9 | 25.0 |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각 년도.

한국은행, 정규일 『소득분배구조와 통화정책 효과』에서 재인용.

- 가구의 소득계층별 월평균 저축액의 분포를 살펴보면 월평균 100만원 미만 저소득계층은 대부분 저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평균 25만원 미만을 저축하는 저소득계층의 비중은 '99년 22.8%에서 '03년 94.8%로 급증하여 저소득계층의 저축여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음³⁾

3) 노동연구원은 '98년부터 '04년까지 총 7차에 걸쳐 노동패널조사 결과를 발표

< 월평균소득 100만원 미만 저소득계층의 월평균 저축액 비중 >

(%)

| | '99 | '00 | '01 | '02 | '03 |
|-------------|------|------|------|------|------|
| 25만원 미만 | 22.8 | 73.3 | 92.8 | 93.7 | 94.8 |
| 25~50만원 미만 | 26.3 | 15.5 | 4.1 | 4.3 | 1.9 |
| 50~100만원 미만 | 33.1 | 7.3 | 2.4 | 1.6 | 2.7 |
| 100만원 이상 | 17.8 | 3.8 | 0.7 | 0.4 | 0.7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 한편 월평균 소득 300만 원 이상 고소득계층의 월평균 저축액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저축액의 분포는 다소 고른 모습을 보이고 있음

·이는 저축을 한 가구 중 고소득계층이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추세를 보인 것과 대조적인 모습으로 교육비, 교통비 등 지출수요의 증대로 고소득계층의 저축여력도 여의치 않음을 반증

< 월평균소득 300만 원 이상 고소득계층의 월평균 저축액 비중 >

(%)

| | '99 | '00 | '01 | '02 | '03 |
|-------------|------|------|------|------|------|
| 25만원 미만 | 3.7 | 16.1 | 19.7 | 23.3 | 23.8 |
| 25~50만원 미만 | 8.5 | 12.8 | 13.1 | 11.9 | 14.0 |
| 50~100만원 미만 | 27.6 | 29.2 | 25.9 | 24.2 | 22.6 |
| 100만원 이상 | 60.1 | 41.8 | 41.3 | 40.7 | 39.6 |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조사』, 각년도.

(3) 가계저축률 하락의 문제점

- 외환위기 이후 가계 저축률 추이는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과 소득계층 간 저축률 격차 확대로 특징지워짐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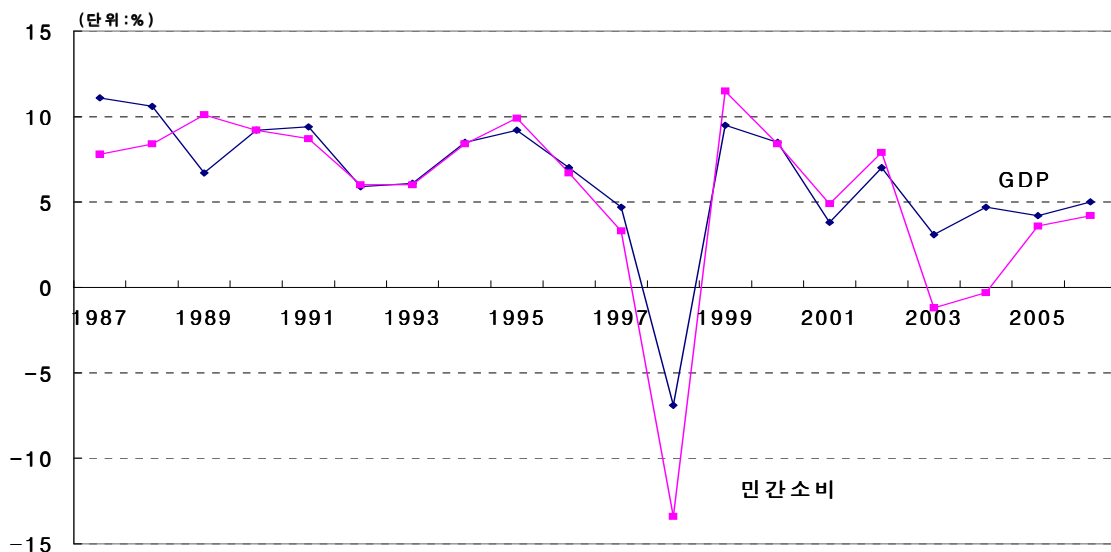
·소득 증가율의 상대적 정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왜곡, 선진국형 소비패

4) 국내 저축률 결정과 관련된 실증연구로는 한국조세연구원(2000),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2006) 등을 들 수 있음

- 턴으로의 전환, 가계의 부양부담 급증 등 여러 가지 경제적, 사회적 변화는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을 촉발시킨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소득계층 간 저축률 격차의 확대와 관련해서도 소득분배구조 악화, 가계부채 상환부담의 증가 등이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1분위 계층(소득 하위 20%계층)의 생계형 차입형태가 심화됨과 동시에 고착화되어가는 패턴을 보이고 있어 동 계층의 기초생활마저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 저소득 노령계층의 대부분이 1분위 계층에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 경제상황이 호전된다 하더라도 1분위 계층의 저축률 회복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다른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됨
 - 전 소득계층에 걸친 저축률 하락은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이나 노후생활대비 자금의 확보 등에 차질을 초래하여 가계부문의 불안정성을 크게 심화시킬 것으로 예상됨
 - 가계저축률 하락은 장차 발생할 소득변동에 대한 가계의 대응능력을 약화 시킴으로써 경기하락 시 가계파산의 위험성을 증대시키게 됨
 - 현실적으로 복지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출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가계부문의 노후대비 저축 부족은 은퇴 후 노후생활의 질을 현격히 저하시킬 것으로 예상됨
 - 저소득계층의 생계형 차입형태의 심화나 전 소득계층에 걸친 노후대비 저축의 부족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귀결될 것임
 -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인구 고령화 현상을 고려할 때 가계저축률의 하락은 궁극적으로는 노후세대의 은퇴 후 생활안정을 위한 정부의 막대한 재정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임
 - 가계저축률 하락은 현재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단순소비 가계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민간소비와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외환위기 이후 민간소비 변동성이 실질 GDP 변동성을 상회함으로써 민간 소비의 변동성이 실질 GDP 변동성 확대의 주요 요인으로 등장하고 있음
- 또한 외환위기 이전 기간에는 경기확장기에는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실질 GDP증가율보다 낮고 경기수축기에는 민간소비의 증가율이 실질 GDP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모습을 보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민간소비가 경기변동을 확대시키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

< 실질 GDP 및 민간소비 증가율 추이 >



자료: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이하의 분석에서는 가계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과 소득계층 간 저축률 격차 확대의 원인을 살펴보고 가계 저축률 제고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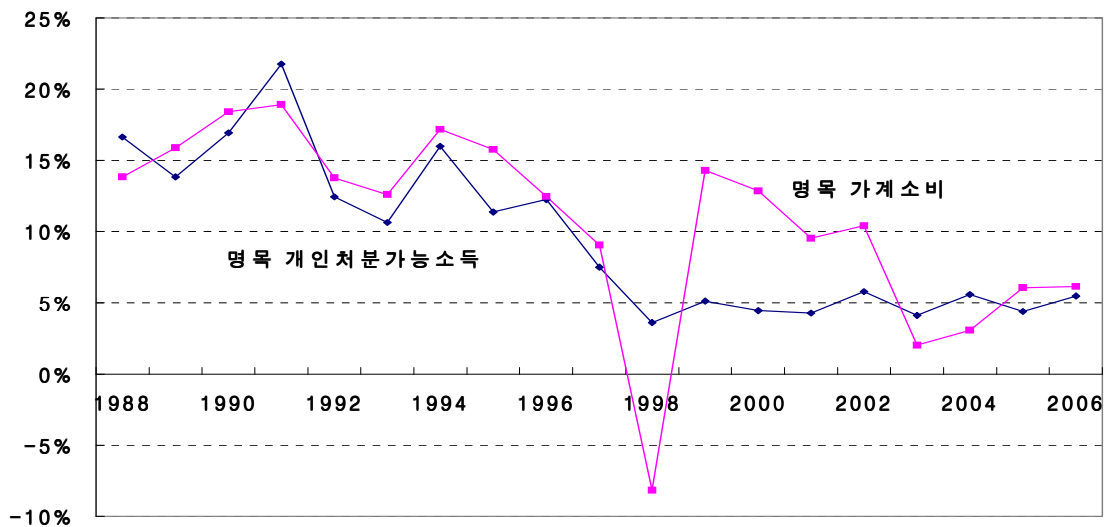
·가계 저축률의 추세적 하락과 관련해서는 거시경제적 변수에 의존하여 살펴보고, 소득계층 간 저축률 격차확대에 대해서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려고 함

2. 가계저축률 하락의 원인 분석⁵⁾

○ 소득 증가율의 정체와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 확대

- 외환위기 이후 가계소비의 변동성이 증대된 가운데 가계소비의 증가율이 가처분소득의 증가율을 상회함으로써 가계저축률은 하락세를 나타냄
 - 1998~2006년 기간 중 명목 가계소비는 7.1% 증가해 온 반면, 같은 기간 중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은 연평균 4.9%에 그침
 - 참고로 1987~1996년 기간 중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과 명목 가계소비는 각각 연평균 14.6%, 15.4% 증가했었는데,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면 외환위기 이후에는 소득과 소비 증가율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소득증가율의 둔화세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남

< 명목 개인처분가능소득과 명목 가계소비 증가율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한편, 외환위기 직후 악화된 소득분배구조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음에 따라 소득계층별 가계저축률 격차도 확대되어 옴
 - 이는 저소득계층을 중심으로 가계의 저축여력이 점차 소진된 데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5) 저축률 결정이론이나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은 부록을 참조

- 외환위기 이후 기업들의 구조조정 확대에 의한 고용 불안정과 개인파산의 증대로 중간소득계층이 감소하고 상위소득계층과 하위소득계층이 증가하면서 소득의 분배구조가 급격히 악화됨
 - 도시근로자 기준 소득 5분위배율은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4.63배에서 1998년 5.41배로 급격히 나빠진 후 좀처럼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또한 지니계수(2인 이상 도시근로자 가구 기준)⁶⁾도 1996년 0.291에서 1998년 0.316으로 악화된 이후 개선되지 않아 2005년 0.310에 머물러 있음
- 이처럼 소득분배구조가 악화됨에 따라 저소득계층이 소비와 저축을 합리적으로 조절할 여지가 크게 줄어들었으며, 현재의 소비를 현재의 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단순소비가계의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 이에 따라 소비의 경기 조절 기능이 크게 위축되고, 오히려 경기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음

< 소득 5분위 배율 및 지니계수 추이 >

(단위: 배, 지수)

|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소득5분위 배율 | 4.63 | 4.50 | 5.41 | 5.49 | 5.33 | 5.37 | 5.18 | 5.22 | 5.42 | 5.43 |
| 지니계수 | 0.291 | 0.283 | 0.316 | 0.320 | 0.317 | 0.319 | 0.312 | 0.306 | 0.310 | 0.310 |

자료 : 통계청, 『가계수지 조사』, 각년도.

- 정부의 종합적인 실업대책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은 회복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가계소득 증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2006년 현재 전체 실업률은 3.3%를 나타내어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의 2.0%에 비해 1.3%p 높은 수준임

< 전체 실업률 추이 >

(%)

|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
| 실업률 | 2.0 | 2.6 | 7.0 | 6.3 | 4.1 | 3.8 | 3.1 | 3.4 | 3.5 | 3.5 | 3.3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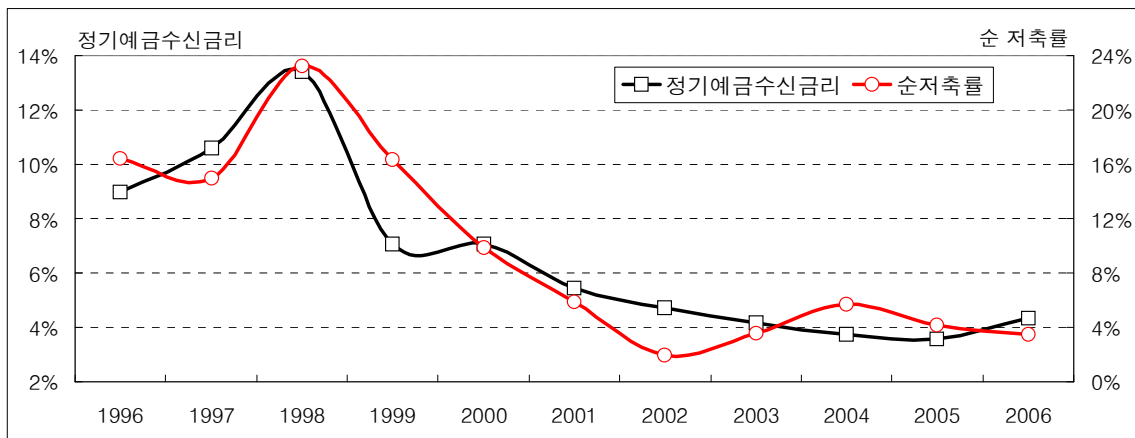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6) 지니계수는 전 계층의 소득분배 상태를 하나의 숫자로 나타내는 것으로 소득분배의 불평등정도에 따라 0에서부터 1까지의 값을 가지며 그 값이 클수록 소득분배가 불균형임을 의미

○ 가계자산 포트폴리오의 왜곡

- 외환위기 이후의 저성장에 따른 저금리 기조의 지속은 정부의 소비자 신용 확대 정책과 맞물려 가계부문의 저축률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 가계대출금리와 정기에금수신금리는 1998년 각각 15.2%, 13.4%를 기록한 이후 급락하여 2006년 현재 5.8%, 4.4%에 머무르고 있음
 - 주택담보대출금리도 2001~2006년 기간 중 연평균 6.0%에 불과하여, 동 기간 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의 상승률 10.2%를 하회하였음
 -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가계 저축률은 외환위기 이후의 하락세를 면치 못하였으며, 부동산 시장의 호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의 증대는 가계부채의 증대로 이어짐

< 정기에금수신금리와 순 저축률 추이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가계부문의 금융자산(안전자산)이 상대적으로 고 수익률을 나타내던 부동산 시장(불안전 자산시장)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초래됨
 - 특히 한국국민은 부동산을 안전자산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이동을 가속화 함
 - 주택점유 형태별 가구분포 추이를 살펴보면 자가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비중은 1990년대 이후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이 시기는 총 저축률이

구조적으로 하락추세로 돌아섰다고 추정되는 시점⁷⁾과 일치하고 있음

< 주택의 점유형태별 가구분포 >

(%)

| | 1980 | 1985 | 1990 | 1995 | 2000 | 2005 |
|---------|------|------|------|------|------|------|
| 자가 | 58.6 | 53.6 | 49.9 | 53.3 | 54.2 | 55.6 |
| 전세 | 23.9 | 23.0 | 27.8 | 29.7 | 28.2 | 22.4 |
| 월세 | 15.5 | 19.8 | 19.1 | 14.5 | 14.8 | 19.0 |
| 무상 및 기타 | 2.0 | 3.7 | 3.1 | 2.5 | 2.8 | 3.0 |

자료 : 통계청, KOSIS.

○ 선진국형 소비패턴으로의 전환

- 1990년대 이후의 소비패턴이 이전의 생활필수품 위주의 소비에서 교통·통신, 교육 등으로 점진적으로 이행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
 - 식료품, 의류신발, 주거 등 소비지출에서 생활필수품적인 요소를 가진 소비지출의 비중이 줄어든 반면,
 - 교통·통신, 교육 등이 소비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어 1990년대 이후의 저축률 하락을 주도해온 것으로 보임

< 소비지출 구성비 구조의 변화 >

(%)

| | 1990 | 1992 | 1994 | 1996 | 1998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2005 |
|-------|------|------|------|------|------|------|------|------|------|------|------|
| 식료품 | 33 | 31 | 30 | 28 | 28 | 27 | 26 | 26 | 27 | 27 | 27 |
| 주거 | 5 | 4 | 4 | 4 | 4 | 3 | 3 | 3 | 3 | 3 | 3 |
| 의류신발 | 8 | 8 | 8 | 7 | 5 | 6 | 6 | 6 | 6 | 5 | 5 |
| 교육 | 8 | 9 | 9 | 10 | 11 | 11 | 11 | 11 | 11 | 11 | 12 |
| 교통·통신 | 9 | 9 | 12 | 13 | 15 | 16 | 17 | 17 | 18 | 18 | 1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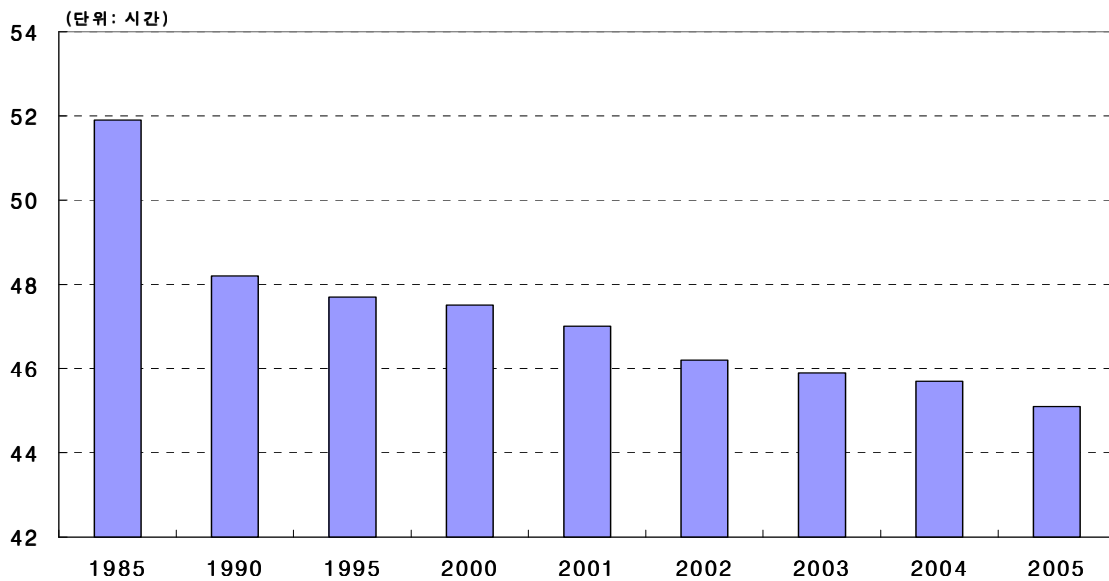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 1980년대 후반 이후로 주당 근로시간의 감소는 가계의 여가활동 관련 소비를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됨

7) 한국조세연구원(2000)에 실증분석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저축률은 1989년 이후로 구조적인 하락세로 돌아선 것으로 추정됨.

·주당 근로시간이 급격히 줄어들었던 기간은 1980년대 후반(1985~1990년 기간 중 3.7시간 감소)으로 저축률의 구조적 추세변화 기간과 일치하고 있어, 이 기간을 거치면서 경제전반적으로 근로소득에 대한 욕구보다는 소비 및 여가에 대한 욕구가 강해졌을 것으로 추측됨

< 전산업 부문 주당 평균 근로시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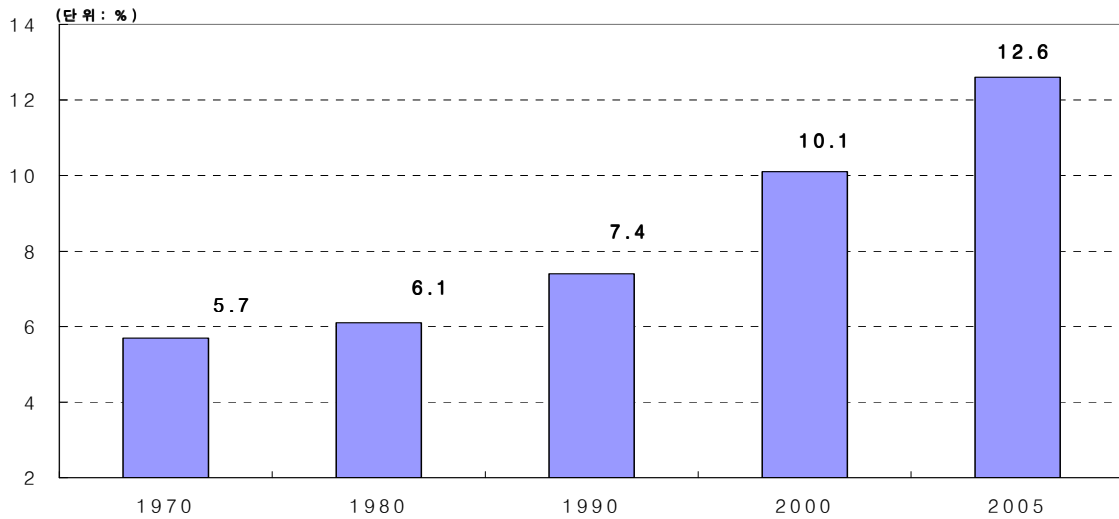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KOSIS.

○ 가계의 부양부담 급증

- 인구구성 상 노년인구 비율의 증대는 생산가능인구의 저축여력을 떨어뜨려 저축률의 하락을 가져옴⁸⁾
- 노년 부양비(65세 이상 인구/15~64세 인구)는 고령화의 진전으로 인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5년 현재 12.6%에 이름

8) 부양인구 비율과 저축률간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로는 박대근·이창용(1997)과 박종규·김진영(2000)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연구에 의하면 저축률과 부양인구 비율 간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노년 부양비 지수 >



자료 : 보건복지부.

- 평균자녀의 수가 줄어들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소득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으며, 특히 높은 교육열로 인하여 사교육비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 .한국의 공교육에 대한 민간부담 지출액은 여타 OECD 국가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사교육비가 지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5.6%,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2%에 달하여 여타부문의 소비지출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가구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2007)

< 공교육에 대한 부담액 >

(%)

| 분류 | 미국 | 캐나다 | 호주 | 일본 | 한국 | 평균 |
|-------|-----|-----|-----|-----|-----|-----|
| 민간부담액 | 2.3 | 1.3 | 1.4 | 1.2 | 2.9 | 1.3 |
| 정부부담액 | 5.1 | 4.9 | 4.5 | 3.5 | 4.6 | 4.6 |
| 합계 | 7.4 | 6.2 | 5.9 | 4.7 | 7.5 | 5.9 |

자료 : 매일경제, 2006.12.12.
현대경제연구원(2007)에서 재인용.

< 가구당 사교육비 지출 비중 >

(%)

| 구분 | 전체 | 연소득 | | | |
|----------------|-------|-------|--------|--------|-------|
| | | ~3천만원 | 3~5천만원 | 5천~1억원 | 1억원~ |
| 응답자 수 | 979 | 276 | 414 | 257 | 32 |
| 월평균 총 사교육비(만원) | 64.6 | 38.1 | 58.3 | 90.4 | 166.4 |
| 월평균 전체 지출액(만원) | 252.9 | 159.8 | 240.4 | 339.4 | 545.7 |
| 지출액 대비 사교육비(%) | 25.6 | 23.8 | 24.3 | 26.6 | 30.5 |
| 수입액 대비 사교육비(%) | 19.2 | 20.5 | 19.2 | 18.5 | 14.3 |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2007)

주 : 자녀가 사교육을 받고 있는 가계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임

- 전체 실업률을 초과하는 청년 실업률의 지속으로 부모세대의 부양부담이 줄어들지 않고 있어, 장년층 이상의 경우 노후생활에 대비한 저축여력이 심각히 훼손되어 있는 실정임

·2006년 현재 청년실업률⁹⁾은 7.4%(체감실업률은 19.5%)에 달하여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에 비해 2.8%p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음

·또한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기업들의 고용유발 감소와 대학 졸업자의 급증 등 높은 청년실업률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노동시장에서의 수급불일치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음

< 청년 실업률 추이 >

(%)

| | 96 | 97 | 98 | 99 | 00 | 01 | 02 | 03 | 04 | 05 | 06 |
|-----|-----|-----|------|------|-----|-----|-----|-----|-----|-----|-----|
| 실업률 | 4.6 | 5.7 | 12.2 | 10.9 | 7.6 | 7.5 | 6.6 | 7.7 | 7.9 | 7.6 | 7.4 |

자료 : 통계청

○ 가계부채 증가에 따른 원리금 상환부담 증대

-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의 가계대출 경쟁과 저금리 정책기조 하에서의 주택금융 수요증가는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함

·2002~2005년 기간 중 은행권의 가계대출은 연평균 9.2% 증가한 반면, 주택

9) 현대경제연구원(2007) 참조

담보대출은 12.4% 증가하여 가계대출 중에서 부동산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02년 52.5%에서 2005년 57.7%로 급증함
 이에 따라 동 기간 중 가계부채 증가율은 연평균 6.4%에 달함

- 가계부채의 증가는 부채금액의 원리금 상환부담을 가중시킴으로써 가계의 저축여력을 저하시키게 됨

- 2005년 현재 가계대출 규모가 약 330조원에 달하여, 연 7%의 금리를 가정 할경우 이자부담액이 약 23조원에 달함
- 이는 2005년 가처분소득 446조 3,389억원의 5.2%에 달하는 규모임
- 금리 1%p의 인상은 3.3조원의 이자비용 부담을 가중(가처분소득의 0.74%)

< 가계 부채 및 가계대출 추이 >

(단위: 조 원)

| | 2002 | 2003 | 2004 | 2005 |
|---------|-------|-------|-------|-------|
| 가계대출 규모 | 249.9 | 279.1 | 301.4 | 329.4 |
| 주택담보대출 | 131.3 | 152.4 | 169.9 | 190.2 |
| (비중, %) | 52.5 | 54.6 | 56.4 | 57.7 |
| 가계 부채 | 496.0 | 520.3 | 542.4 | 601.6 |

자료 :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 한편, 소비자 금융의 확대로 인한 유동성 제약의 완화는 저소득계층의 가계부채가 급증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이후 저소득계층의 급격한 저축률 하락의 단초를 제공함

- 외환위기 이전인 1996년과 외환위기 이후인 2000년의 고소득계층과 저소득 계층의 연평균 소득 증가율과 부채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 1분위 소득계층의 소득은 1.7% 감소한데 비해 부채는 18.5% 증가한 반면 5분위 고소득계층의 소득증가율은 7.7%에 부채 증가율은 4.9%에 그침

< 1996~2000년 기간 중 소득 및 부채 증가율 >

(%)

| | 평균 | 1분위 | 2분위 | 3분위 | 4분위 | 5분위 |
|------|-----|------|------|-----|-----|------|
| 연간소득 | 4.1 | -1.7 | 0.7 | 1.9 | 3.1 | 7.7 |
| 연간지출 | 9.3 | 6.4 | 8.2 | 8.7 | 9.8 | 11.0 |
| 저축액 | 6.8 | 3.9 | 1.9 | 5.7 | 5.9 | 9.5 |
| 부채액 | 7.9 | 18.5 | 11.1 | 5.9 | 7.4 | 4.9 |

자료 : 통계청, KOSIS

4. 정책적 시사점

- 첫째, 저축률의 하락으로 초래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정부 정책의 틀은 Welfare보다는 Workfare를 증진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삼아야 함
 - Welfare 측면으로 방향을 잡을 경우 유럽의 경우에서 보듯이 高실업률을 고착화하는 동시에 정부의 재정부담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여 가계의 소득을 낮추는 악순환을 초래함
 - Workfare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고통이 심한 저소득층, 청년층, 노인층 일자리 창출과 실업자 전직지원 프로그램에 초점을 맞춰야 함
- 둘째, 미시적인 측면에서는 가계에 대한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보다는 불필요한 지출 부담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바람직함
 - 세부적으로는 대중교통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공영 운송수단에 대한 정부 보조금을 늘려 교통관련 비용(주행비용) 부담을 낮춰야 함
 - 공교육을 조속히 정상화하여 사교육 부담도 줄여야 한다. 또한, 가계 부채의 증가를 억제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이 늘지 않도록 해야 함
- 셋째, 가계의 건전한 재산형성을 유도하고 지원해야 함
 - 대국민 경제 및 금융교육을 강화하여 가계가 자산 포트폴리오를 균형있게 구성하도록 유도해야 함
 - 또한, 토지 가격 부담을 줄인 ‘환매조건부 주택’의 공급과 같이 저소득층의 건전한 재산형성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 필요가 있음¹⁰⁾
- 마지막으로, 정부는 금리 인상을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음
 - 가계부채가 위험수위까지 올라온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은 가계의 이자비용을 늘려서 저축률을 더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가계 파산까지도 초래할 수 있음.

한상곤 연구위원 (3669-4120, sghan49@hri.co.kr)

10) 환매조건부 주택은 정부가 주택을 건축비 가격에 공급하고, 입주자가 주택 매도를 원할 경우에는 초기 매입 가격에 적정 금리를 더한 가격으로 정부에 환매하는 것으로 은행 적금을 드는 효과가 있음

< 부 록 >

1. 저축률 결정에 관한 이론적 고찰

- 소비이론¹¹⁾은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1936) 이후로 거시경제이론과 더불어 발전되어왔으며,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1953) 이후로는 개별 경제 주체의 최적선택에 기반한 미시적 기초를 강조하고 있음
- (절대소득 가설, 상대소득 가설) 경제주체들의 소비행위와 관련하여 현재 소득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하였음
 -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1936)에 의하면 현재소비는 현재 실질소득의 절대적 크기에만 의존하며, 과거 소득이나 타인의 소비에는 영향을 받지 않음
 - 이에 반해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1949)은 소비의 전시효과(사회적 상대성)과 톱니효과(역사적 상대성)에 의해 소비가 상대적으로 결정된다고 봄
- (항상소득 가설) 프리드만(1957)은 횡단면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항상소득에 따른 저축률은 일정한 반면 현실에서 관측되는 저축률과 소득사이의 양(+)의 관계는 임시소득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은 저축률 결정과 관련하여 이후의 실증적인 연구에서 일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
- (평생소득 가설) 모딜리아니, 안도의 평생소득가설(1963)에 의하면 전 생애에 걸친 소비평활화를 위해서는 노년기와 유년기에는 음(-)의 저축을 하고, 소비에 비해 소득이 큰 중년기에는 양(+)의 저축을 함
 - 평생소득 가설에 의하면 저축률 격차는 기본적으로 연령과 관계가 있으며, 저축률이 낮은 젊은 계층이 저소득계층에 많이 포함되어 있고 저축률이 높은 중장년층이 고소득층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봄
 - 한편 최근에는 연령적인 요인 이외에 사회보장제도나 개인의 시간선호율 차이로 인하여 저축률 격차가 발생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음
- (기타 모형) 예비적 저축동기 모형은 저축률 격차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11) 저축은 소득 중 소비되지 않은 부분으로 정의되므로 소비이론은 저축이론과 일맥상통함

미래소비의 불확실성을, 유증동기 모형은 부모세대의 자녀세대를 위한 유증을 저축률 격차의 요인으로 제시하고 있음

·예비적 저축동기 모형은 한계효용함수의 불록성 가정에 기반하여 미래소비의 불확실성은 경제주체들의 현재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함

·유증동기 모형에 의하면 고소득계층은 현재의 자신보다 소득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식세대를 위해 보다 많은 유산을 남기려 하는 반면, 저소득계층은 자식세대가 자신보다 소득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므로 유증을 위한 저축동기가 낮게 나타난다고 주장함

2. 저축률 결정 요인

1) 가계소득

-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 듀젠베리의 상대소득가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 모딜리아니, 안도의 평생소득가설 등 대부분의 거시경제학의 소비이론은 소비수준의 결정과 관련하여 소득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절대소득가설과 상대소득가설은 현재소득이 경제주체들의 현재소비에 미치는 효과를 주로 분석하였으며,

·항상소득가설, 평생소득가설 등은 미래전망적 경제주체들의 전 생애에 걸친 소득과 부의 효율적 배분을 강조하였음

-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소득발생 시점의 강제적인 재배치를 통하여 경제주체들의 소비행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소득계층별로 상이한 소득대체율¹²⁾로 인해 소득계층별 저축률 격차를 가져옴

·국민연금과 같은 사회보장제도는 전형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소득을 고소득계층에 비해 높은 비율로 대체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계층의 저축유인이 상대적으로 작게 됨

·사회보장제도는 일반적으로 저소득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에 중점을 두고

12)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의 연금 급여수준이 얼마나 관대한가의 척도로서 사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람이 받는 연금을 은퇴하기 전의 평균보수로 나눈 비율임(이준구, 『재정학』, 제3판, p.283)

있어 고소득계층의 미래대비 수단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고소득계층은 추가적으로 사적인 저축수단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2) 연령 및 인구구조

- 평생소득가설은 미래전망적 경제주체들의 생애에 걸친 소비평활화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곧 거시경제 측면에서 개별국가의 연령 및 인구구조의 차이에 의해 국가 간 저축률이 상이함을 의미함
 - 현재 선진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로 인한 저축률 하락 현상을 이해하는 데 유효함

3) 가계자산 및 부채

- 항상소득가설과 평생소득가설 등 미래 전망적인 소비함수이론에 의하면 부동산 및 금융자산 가치의 변동으로 인한 富의 효과는 소비에 영향을 미치게 됨
 - 실물자산가치 변동으로 인한 부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주식가격의 변동보다는 부동산 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알려져 있으나¹³⁾
 -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자산의 부의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¹⁴⁾
- 한편, 가계부채의 증대로 유동성 제약에 직면한 가계는 저축여력이 심각히 결핍되어있어 현재소비를 현재소득만으로 충당하는 단순소비가계로 전락할 가능성이 큼

4) 이자율

- 이자율 변화에 대한 현재소비의 증감은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의해 결정이 됨
 - 소득효과 : 소비자가 현재 저축자이면 이자율 상승은 이자수익의 증가를

13) 미국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의한 부의 효과가 주가상승에 따른 부의 효과보다 두 배나 더 큰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14) 이항용, 『주택가격 변동과 부의 효과』, 금융경제연구, 제181호,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의미하므로 현재소비와 미래소비가 모두 증가하게 되며, 현재 차입을 하고 있는 사람은 현재소비와 미래소비를 모두 줄이게 됨

·대체효과 : 이자율 상승은 현재소비의 기회비용 상승을 의미하므로 소비자는 현재소비를 줄이고 미래소비를 늘리게 됨

- 실증분석 상으로는 이자율 변화의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를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재소비는 이자율의 증가함수라고 가정하는 것이 일반적임

월간 경제 동향

- 실물 동향 : 내외수 동반 호조로 경기 회복 기대감 상승
- 수출 부문이 두 자릿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소비 및 설비투자의 내수 부문도 회복세가 가시화되고 있음
 - 생산 : 1/4분기 경제성장률은 2006년 4/4분기 성장률과 동일한 전년동기대비 4.0%를 기록하며 경기 저점을 다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다만 3월 산업생산 증가율은 逆 기저효과(base effect)의 영향으로 전년동월 대비 3.1% 증가에 그침 (조업일수를 감안하면 4.3% 증가)
 - 소비 : 3월 소비재 판매액은 음식료와 승용차 등의 판매 감소에도 불구하고, 에어컨, 컴퓨터 등의 판매 호조로 7.3% 증가함
 - 투자 : 3월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 호조로 전년동월대비 6.4% 증가한 반면, 건설기성(전년동월대비)은 공공부문에서 16.0% 증가하였으나 민간부문에서는 3.6% 감소함에 따라 2.0% 증가에 그침
 - 수출 : 수출 증가율은 3월의 전년동월대비 13.6%에 이어 4월에도 17.8%를 기록함으로써, 작년 1월 이후 15개월 연속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음

< 주요 실물 경제 지표 >

(전년동기대비, %)

| | | 2005 | 2006 | | | | 2007 | | | |
|------|------------|--------|-------|----------|----------|----------|----------|----------|-------------|-------------|
| | | | 연간 | 1/4 | 2/4 | 3/4 | 4/4 | 1/4 | 4월 | |
| 경기 | 경제성장률 | 4.2 | 5.0 | 6.3(1.0) | 5.1(0.8) | 4.8(1.2) | 4.0(0.9) | 4.0(0.9) | - | |
| | 수요 | 소비재판매 | 4.1 | 4.7 | 5.3 | 6.1 | 2.9 | 4.5 | 7.2 | - |
| | | 설비투자추계 | 6.3 | 7.4 | 6.2 | 6.7 | 11.8 | 5.1 | 11.2 | - |
| | | 건설수주 | 7.3 | 9.0 | -8.5 | -14.7 | 37.1 | 27.1 | 26.3 | - |
| | | 수출 | 12.0 | 14.4 | 10.6 | 16.9 | 16.3 | 13.8 | 14.9 | 17.8 |
| 공급 | 산업생산 | 6.3 | 10.1 | 12.8 | 11.5 | 11.3 | 5.2 | 3.3 | - | |
| | 취업자수 (만명) | 2,286 | 2,315 | 2,258 | 2,341 | 2,331 | 2,330 | 2,284 | - | |
| | 실업률 (%) | 3.7 | 3.5 | 3.9 | 3.4 | 3.3 | 3.2 | 3.6 | - | |
| | 수입 | 16.4 | 18.4 | 19.7 | 20.4 | 21.1 | 13.0 | 13.2 | 19.9 | |
| 대외거래 | 경상수지 (억\$) | 166 | 61 | -11 | 7 | 4 | 61 | -15 | - | |
| | 무역수지 (억\$) | 232 | 161 | 13 | 48 | 25 | 75 | 28 | 8 | |
| 물가 | 소비자물가 | 2.8 | 2.2 | 2.1 | 2.2 | 2.5 | 2.1 | 2.0 | 2.5 | |
| | 생활물가 | 4.1 | 3.1 | 3.1 | 3.1 | 3.5 | 2.6 | 2.3 | 2.9 | |

주 : 경제성장률의 ()안은 계절조정 전기비 기준, 진한 글자체는 최근 발표된 경제 지표임.

□ 금융 동향 :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강세

○ (해외 금융 시장) 유로화에 대한 달러화의 약세

- 금리 : 주요 경제 지표 부진에도 불구하고 주식시장 등의 호조 등의 영향으로 전월대비 소폭 상승 (국채 10년물 : 4.57→4.67%)
- 환율 : 미 달러화는 1/4분기 미 경제성장률 대폭 둔화 등으로 유로화에 대해 사상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하면서 전월대비 크게 약세를 보였고, 일본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함에 따라 캐리 트레이드가 재개 되면서 엔화에 대해서는 강세 시현 (\$/€ : 1.3354→1.3550 ¥/\$: 117.83→120.43)

○ (국내 금융 시장) 주가, 금리, 환율의 트리플 강세

- 주가 : 한미 FTA 타결 등으로 투자심리가 개선되는 가운데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세 등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며 전월말 대비 100p 이상 상승 (1,452.5→1,567.7)
- 금리 : 외환당국의 은행권에 대한 단기외화차입 자제 조치 등으로 외은 지점들의 단기 유동성 확보 경쟁으로 자금수요가 증가하면서 전월말 대비 크게 상승 (국고채 3년 수익률, 4.76→4.99%)
- 환율 : 한미 FTA 타결에 따른 대미 수출 증가 전망 등에 따른 외국인 주식투자자의 대규모 순매수, 수출 기업들의 달러화 환전 수요 및 외은 지점들의 대규모 본지점 차입 등으로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 대비 크게 하락 (940.9→927.6)

○ (전망) 단기 유동성 확보 경쟁 등의 완화로 금리 소폭 하락 전망

< 주요 금융 지표 >

| | | 2005 | 2006 | | | | 2007 | | |
|----|------------|---------|---------|---------|---------|---------|---------|---------|--------------------|
| | | 4/4 | 1/4 | 2/4 | 3/4 | 4/4 | 1/4 | 4.27. | 5.4. ¹⁾ |
| 국내 | 거래소 주가 | 1,379.4 | 1,359.6 | 1,295.2 | 1,371.4 | 1,434.5 | 1,452.5 | 1,542.5 | 1,567.7 |
| | 국고채3년(%) | 5.08 | 4.93 | 4.92 | 4.57 | 4.92 | 4.76 | 5.03 | 4.99 |
| | 원/달러 | 1,011.6 | 971.6 | 948.9 | 946.2 | 929.8 | 940.9 | 929.2 | 927.6 |
| 해외 | DOW | 10,718 | 11,109 | 11,150 | 11,679 | 12,463 | 12,354 | 13,121 | 13,241 |
| | Nikkei | 16,111 | 17,060 | 15,505 | 16,128 | 17,226 | 17,288 | 17,400 | 17,395 |
| | 미국채10년(%) | 4.39 | 4.85 | 5.14 | 4.63 | 4.70 | 4.57 | 4.69 | 4.67 |
| | 일국채10년(%) | 1.48 | 1.78 | 1.93 | 1.68 | 1.69 | 1.60 | 1.63 | 1.63 |
| | 달러/유로 | 1.1849 | 1.2118 | 1.2790 | 1.2674 | 1.3199 | 1.3354 | 1.3651 | 1.3550 |
| | 엔/달러 | 117.75 | 117.78 | 114.42 | 118.18 | 119.07 | 117.83 | 119.6 | 120.4 |
| | 두바이(\$/배럴) | 53.19 | 59.16 | 67.17 | 57.33 | 56.71 | 63.12 | 63.98 | 63.76 |

주 : 1) 해외지표는 전일(5.3) 기준